

‘불법파견 범죄’ 사과 없는 한국지엠

금속노조, 5일 지엠 부평공장 앞 결의대회... “불과 특별교섭 즉각 응해야”



지났지만, 한국지엠 사측은 묵묵부답이다. 금속노조와 노조 경남, 인천지부 두 곳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사과와 특별교섭 개최를 요구했다. 사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사측은 침묵을 고수한다”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 때까지 경남지부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키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가 4일 오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특별교섭·4대요구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7월 25일 대법원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에도 묵묵부답인 한국지엠 자본에 항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개최와 함께 한국지엠 원청에 불법파견과 비정규직지회 활동 탄압 등에 대한 공식 사과, 해고자 복직 등 4가지를 요구했다. 황호인 인천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장은 4대 요구를 설명하며 한국지엠 사측의 사과와 배상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정규직 노동자들도 힘을 보탰다. 조재용 노조 한국지엠지부 부지부장은 “비정규직 늘리고 외면하는 상황이 더는 없어야 한다”라며 “한국지엠지부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계속 사측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한국지엠의 엔진·차체·도장·조립·품질관리·생산·KD 등 모든 공정에서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도 한국지엠 사측의 모르쇠를 강하게 비판했다. 배성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해고자는 현장으로 돌아오고 범죄자는 감옥에 가야 한다”라며 “노동자들 요구가 옳다. 원청은 교섭장에 빨리 나와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순희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대회 참가자들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주변을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와 현재 상황을 알렸다. 행진을 마친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부평, 창원비정규직지회 임원들은 한국지엠 사측에 불법파견 특별교섭 및 4대 요구를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나온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상무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내놓았다.

대법원판결이 난지 한 달도 더

“조선업 발전 주역은 노동자..성장만큼 분배하라”

4일, 금속노조·조선노연 울산 공동투쟁 전개...이어 9일 거제 공동투쟁 예고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조선소 자본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 지급을 요구하며, 9월 9일 거제 한화오션 집회에서 다시 한번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이 9월 4일 오후 울산시 현대중공업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추석 전까지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시안을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19만 금속노조 이름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한국 조선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원하청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성과를 분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선노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호선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은 ” 사업장은 다르지만 조선노연 동지들은 하나다 “라며 “조선노연 동지들이 똘똘 뭉쳐 강인한 투쟁으로 임단협투쟁 승리하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9월 9일 거제에서 조선소 자본의 행태를 규탄하는 금속노조-조선노연 공동투쟁을 결정했다. 이어, 추석 전까지 자본이 적절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서울과 분당에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다.

원청 기아차 책임 묻는 투쟁 필요하다

3일, 동희오토 비정규직 문제 토론회... “증거 이렇게 많은데 불과 패소 납득 안돼”

금속노조가 동희오토 불법과건 혐의에 최근 판례를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1, 2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모색했다.

금속노조가 9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비정규직 100% 공장의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동희오토 1.2심 판결과 대법원의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불법과건 판례를 비교했다.

동희오토는 2001년 기아차와 동희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공장으로, 생산공정 노동자가 모두 비정규직이다. 금속노조 기아

차지부 동희오토분회 조합원들은 현재 법원에서 동희오토 불법과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우리 사회가 위탁생산 방식에 별다른 문제 제기 하지 않고, 너무 쉽게 현장에 도입했다” 라면서 “반면 원청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라고 비판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노조법 2조·3조 개정 투쟁은 동희오토에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가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투쟁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인호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 분회장은 “원청인 동희오토가 제시한 각종 계획에 따라 업무 공정과 배치 등이 통으로 바뀌어왔다” 라면서 “이것은 동희오토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행하고 있다는 증거” 라고 꼬집었다.

현재 동희오토 불법과건 판결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에 불법과건을 판단하는 모든 요소를 정확히 확인하라고 촉구했다.